

투데이 칼럼

전북특별자치도, 올림픽의 새 역사를 쓴다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도시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선정되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뜻밖이란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간의 준비과정을 되짚어보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 저비용?효율, 화합과 연대 등을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방향성과 전북이 추구하는 정책이 부합된다는 점, 전북의 탁월한 전략과 추진력, 도민의 결의에 찬 함성이 어우러져 빛어낸 성과로 요약된다. 이제 한류문화의 중심이며, 그 자신이 잘 보존?전승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별함을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기회와 알려져야 하는 의무를 동시에 얻었다. 전북이 2036년 하계올림픽 최종 개최지로 선정된다면(제36회 2036 전주 하계올림픽) 2036년 7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17일간, 도심권, 새만금권, 동부권, 그리고 인접도시에서 33개 종목을 분산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서울과의 경쟁에서 압도적인 차이로 승부를 낸 전북은 대한민국 후보로서 세계 여러 국가와 치열한



유 지 당
무주군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위원장

경쟁을 해야 한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국내 후보도시 선정만이 아니었고, 단순한 올림픽 유치도 아니다.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까지의 과정과 결과에 열정을 담아 위대한 올림픽의 역사를 새로 쓰는 것이다. 역사의 주역이 되기 위해 지금부터 우리 도민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고 있다. 지방자치를 시작하면서 주민 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주민이 주도하여 여러 형태의 사회단체를 조직해, 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나뉘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성공 여부는 주민의 역량에 달려있듯,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민간 영

역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역할과 기능은 서로 다르겠지만 올림픽 유치와 성공 개최라는 공공의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데 뜻을 같이해야 한다. 올림픽 분산 개최 계획에 따른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연대로 힘을 얻은 만큼, 각 자치단체 주민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과 세대, 이념을 아우르려는 노력은 범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얻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다. 이제 우리가 서야 할 곳은 국제 무대다. 이번엔 세계를 놀라게 할 차례다. 그간 세계, 국제 대회에서 보여준 도민의 관심, 열정, 그리고 거기서 얻은 자긍심을 떨쳐

를 삼아 각 분야에서 모두의 역량을 집중하자. 결과가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대하기 앞서, '해냈다'는 자부심과 '해낸다'는 자신감으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도전하여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 꿈을 현실로 이끌어내는 것이 올림픽 정신이라면 지금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 아니겠는가. 물론 예견되는 난관을 헤쳐나가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충분한 명분과 자격을 갖췄다 하더라도 불리한 여건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다고 상대적으

로 열악한 환경을 타할 것도 없다. 올림픽 국내 후보도시로 전북이 선정된 것은 기반시설이 훌륭해서도, 지지기반이 탄탄해서도 아니다. 약점을 보완해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에 공감하고 높이 평가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한편엔 절실함이 있었다. 간절함만큼 강한 자각제는 없듯, 간절함을 품고 있는 상대와 겨루는 것이 가장 어렵다. 우리의 염원을 이룰 때까지 간절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사설

미국 반도체법 폐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반도체법(칩스법)을 폐기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은 2022년 바이든 행정부가 제정한 법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폐기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강조하며 정부 보조금과 규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왔다. 반도체법이 폐기되면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위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과 협력할 기회가 늘어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다시 조정될 수 있다. 미국 반도체 기업의 부담 증가도 따른다.

반도체법이 폐지되면 미국 기업들은 정부 보조금 없이 독자적으로 연구개발과 제조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 반도체법이 폐기되면 미국 내 투자 인센티브가 줄어들고, 기업들의 투자 전략에 변화가 필요하다. 미국 반도체법 폐기가 중국과의 기술 협력 장벽을 낮춘다면, 한국 기업들은 다시 중국 시장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중국에 D램과 낸드플래시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미국 규제가 완화되면 중국 내 생산 확대가 가능할 수 있다.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이 위축되면, 한국 기업들이 미국 수출을 줄이고 유럽이나 동남아시아로 시장을 확대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도 있다. 중국과의 반도체 협력이 다시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KBS 수신료 문제

공영 방송인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운영을 위해 수신료 징수제를 실시하고 있다. 텔레비전 방송 시청료로 불리다가 지난 1989년부터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로 명칭이 바뀌었다. KBS는 공영방송 재원의 안정화를 위해 수신료 인상을 꾸준히 추진해 왔지만 정치권과 사회단체의 반대에 부딪혔다. 특히 정권 교체와 KBS사장 선임문제가 맞물리면서 매년 공영방송의 공정성 논란이 일고 수신료 인상안이 좌절되었다. 1961년 12월 31일 서울텔레비전 방송국(KBS)이 개국했다. 그 뒤 1963년 1월 1일부터 100원의 '텔레비전방송시청료'를 징수했다. 1981년 4월 컬러텔레비전 방송 시작과 함께 컬러TV는 월 2500원, 흑백TV는 800원을 징수했다. 그러나 흑백텔레비전에 대해서는 1984년 12월부터 시청료

징수를 면제했다. 1985년 시민단체에 의한 시청료 거부운동을 거친 뒤 1994년 10월부터 전기요금에 통합 징수된다. 현재, KBS 및 EBS가 변화된 미디어환경에 따른 경영혁신과 공적 프로그램 추가 노력을 담보로, 수신료 인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수신료의 금액은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징수한다. KBS수신료는 징수된 수신료를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원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수신료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BS는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수신료 인상 추진 움직임과 관련하여 EBS는 최대 15%의 배분을 주장하기도 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예산·인원 감축 조치 반대하는美 EPA 직원들



25일(현지 시간) 미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환경보호청(EPA) 직원들과 그 지지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EPA 예산·인원 감축 조치에 반대하며 행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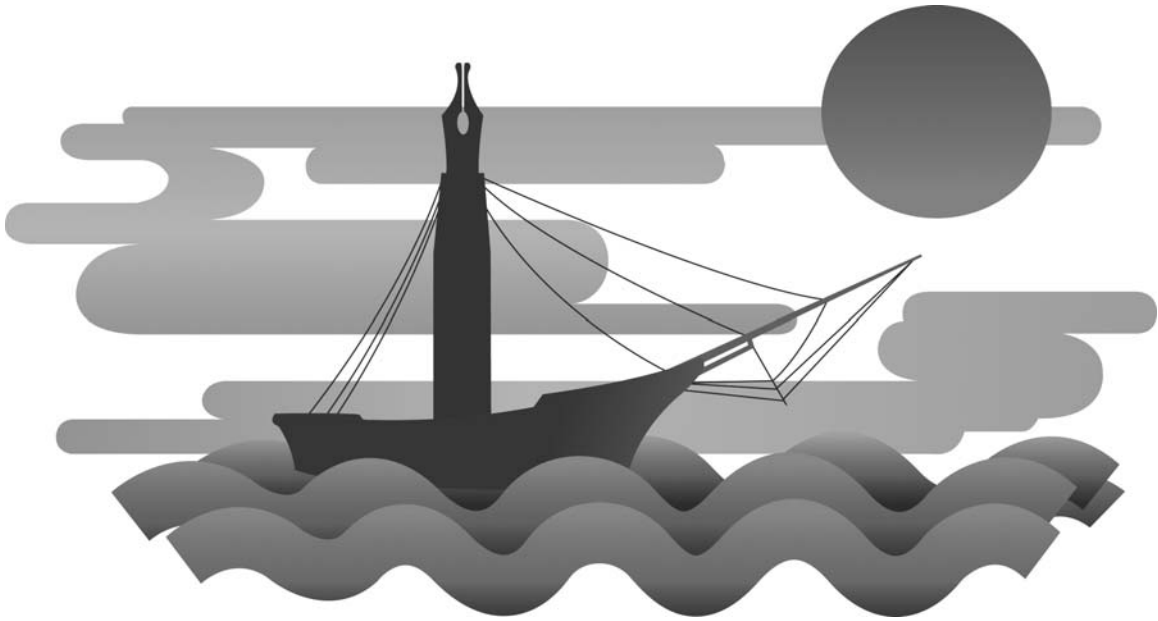
헝가리 시위대 “집회는 기본 권리”



25일(현지 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시위대가 “집회는 기본 권리”라고 쓰인 팸플릿을 들고 자유 다리를 점거하고 있다. 시위대는 헝가리 의회가 지난 18일 성소수자(LGBTQ+) 권익을 옹호하는 연례 프라이드 행진을 금하는 법안을 통과한 것에 반대로 거리로 나섰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